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

Colombi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20. 5.

관계부처 합동

동 전략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될 예정이며, 국내 및 수원국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I. 전략적 중요성

□ 콜롬비아의 전략적 중요성

☞ 콜롬비아는 중남미 세 번째 규모의 소비시장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이며,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 국가로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중요 협력국**

- **(중남미 주요 시장)**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세 번째 규모의 소비시장이자 꾸준히 경제성장 중인 국가로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로 역할 가능
 - 다만 ▲극심한 지역 간 발전격차, ▲인권, 양성평등, 인종 불평등, ▲지난 52년간의 내전 후유증 ▲불법 작물재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저해 요소로 상존
-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 콜롬비아는 한국전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5천여 명의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로, 2011년 산토스 대통령 방한 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 격상
 - 양국의 특별한 외교적 관계에서 개발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다대

□ 콜롬비아의 개발협력 수요

- **(심각한 부의 불균등 분배)** 콜롬비아는 2019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 불평등지수(지니계수) 0.50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로 분류
 - 국가 균형개발 및 부의 분배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필요
- **(분쟁 피해복구 및 평화구축)** 콜롬비아는 52년간 지속된 내전이 2016년 평화협정 체결로 표면적으로는 종식되었으나, 분쟁 피해 지역 빈곤, 국내난민 및 반군 사회 재통합 문제가 심각하며, 베네수엘라 국가 불안사태로 인한 대규모 난민(총 180만 명 이상) 유입으로 사회 불안정 지속

-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로서 평화사회 구축을 위한 분쟁 피해지역 사회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난민 지원 프로그램 추진 필요
- **(산업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 콜롬비아 경제는 석유, 석탄 등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 등 부가가치 창출 산업 기반이 미약하여 원자재 가격에 따른 경제 변동성 다대
- 콜롬비아 전체 기업 중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제조업 기반 강화 및 수출 다각화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경제기반 강화 필요

□ 한국 對 콜롬비아 관계

- (외교관계) ' 62.3.10. 수교
- (주요 협정체결) 문화협정(' 76), 사증면제협정(' 81), 과학기술협력협정(' 82) 무역협정(' 86), 한-콜 FTA(' 16), 양자 간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18)
- 對 콜롬비아 교역·투자현황

(단위: 백만\$)

	2017	2018	2019
수출액	814	1012	495
수입액	651	834	340
무역수지	163	178	155

- 양국 간 무역수지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 중이나 2014년 부터 우리 측 무역수지 흑자 규모 감소 추세

□ 對 콜롬비아 ODA SWOT 분석(지원시 고려사항)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콜 정부 간 우호적 외교관계 ☑ 현지 개발협력 수요에 대해 종합서비스(total service)가 가능한 다양한 사업수단 보유 ☑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ODA 사업 기획, 관리, 평가 역량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원조기본협정 미체결 ☑ 유무상 ODA 및 여타 개발자원과의 연계 미흡 ☑ 난민 관련 평화구축 분야에 대한 제한적 현장성 및 전문성
Opportunity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롬비아의 빠른 경제·사회 발전 추세 ☑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속적 발전 가능성 ☑ 콜롬비아의 산업구조 혁신 및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 의지 ☑ 평화구축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정세/치안 안정화 추세 ☑ 콜롬비아 진출 한국기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치안 상황 ☑ 콜롬비아의 OECD 회원국 가입에 따른 개발환경 변화 ☑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에 따른 사업추진 비용 증가 ☑ 분절화된 수원체계

II. 수원국 분석

1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新 국가개발계획 ‘ 콜롬비아를 위한, 평등을 위한 협정 ’ 체결

- (신정부 5개년 국가개발계획 발표) 2018년 8월 취임한 이반 두케(Ivan Duque) 대통령의 신정부는 5개년(2018-2022) 국가개발전략으로 ‘ Pacto por Colombia, Pacto por la Equidad(콜롬비아를 위한, 평등을 위한 협정) ’ 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동 협정을 비준함
- (국가개발계획 주요 어젠다) 콜롬비아 정부는 ▲적법성 ▲기업가정신 ▲평등을 3대 축으로 하는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민의 안전 및 정의를 위한 ‘ 적법성 ’ 확보를 통해 ‘ 기업가 정신 ’ 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증대하고, 마침내 전 국민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 평등 ’ 한 사회를 목표로 함

<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주요 분야 >

목표	주요 내용
1. 적법성	① 자유보장을 위한 안보 및 공권력 강화, ② 법치의 강화 및 공존, ③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연맹, ④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국가, ⑤ 시민참여 확대
2. 기업가 정신	① 성장가능한 환경 조성, ② 기업 개혁, ③ 기회 확대, ④ 행정 간소화, ⑤ 농촌 개발, ⑥ 관광업 개발
3. 평등	① 어린이 우대, ② 효율적이고 우수한 지속가능 보건 시스템, ③ 우수한 교육을 통한 기회확대, ④ 식량안보를 위한 연맹, ⑤ 존엄성이 보장되는 생활환경 조성, 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두의 시장접근성 강화 및 적절한 수입 보장, ⑦ 오렌지 청춘(juventud naranja), ⑧ 노인의 존엄성 및 행복 증진, ⑨ 개인의 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스포츠와 여가, ⑩ 소외없는 사회, ⑪ 시장 연결성이 높은 미래첨단 사회

□ 콜롬비아 정부 수원 체계

- 콜롬비아 대외원조 수원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대통령실이며 재무부 및 국가개발계획청(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DNP)이 유상원조, 외교부 및 국제협력청(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de Colombia, APC)이 무상원조를 담당함.
- 개발협력 총괄 협의체로서 국제협력청(APC), 외교부, 국가개발계획청(DNP)이 △국가적·지역적 우선순위, △국가개발전략, △2030 어젠다를 고려하여 국제협력전략* 공동 수립
- * 국제협력전략(ENCI: Estrategia Nacion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 원조 분절화를 예방하고 新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 및 분야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청, 외교부, 국가개발계획청 협력 하 2019-2022년 국제협력 운영 방안 수립

〈콜롬비아 정부기관의 대외원조 업무 구분〉

정부부처 및 기관	역할 및 업무
국제협력청 (A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롬비아 정부의 대외원조 유치 총괄 - 대외개발협력 정책 조정 - 무상원조 총괄 - 개발협력파트너십 총괄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에 대한 공식외교채널 - 무상원조 관련 협정 서명권자
국가개발계획청 (D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개발계획(5개년) 수립 - 유상원조 총괄 - 대외투자 조정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개발협력사업 담당 - 사업별 이행현황 모니터링

□ 수원총괄기관

- (무상원조) 국제협력청(APC: 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은 콜롬비아 무상원조 수원총괄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민간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총괄 관리·조정하고,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실행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대통령실 직속 산하 기관

※ KOICA 사업 추진 시, 사업 전 단계에 걸쳐 APC와 협업

- (유상원조) 국가개발계획청(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DNP)은 콜롬비아 유상원조 수원총괄기관으로서 국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실 직속 산하 기관

※ EDCF 사업 추진 시, 사업 전 단계에 걸쳐 DNP와 협업

□ 공여국 협력 체계

- 콜롬비아 정부 및 타 공여기관 간 원조조화를 위한 협의체(Grupo de Cooperantes)가 구축되어 있으며, 공여국간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 지원 추진 도모
- 공여국 협의체를 통해 공여국간 국제협력 전략에 대한 의견교환을 토대로 콜롬비아 정부 측에 공동의견서 제출

□ 對콜롬비아 주요 공여국 현황 (OECD DAC 공시, 2017-2018 평균액 기준)

(단위 : 백만\$)

순 위	국 가	지원액
1	독일	364.9
2	미국	323.6
3	프랑스	268.9
4	유럽연합	78.2
5	노르웨이	56.6
6	캐나다	40.2
7	스위스	39.8

8	스페인	39.4
9	영국	39
10	한국	35.3

□ 對콜롬비아 ODA 프로젝트 주요 분야

순 위	분야	비율
1	사회 인프라 서비스	40%
2	범분야(Multi-sector)	34%
3	생산	7%
4	경제인프라	7%
5	교육	5%
6	인도주의적 지원	3%

Ⅲ.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콜롬비아 CPS 추진목표

- 사회 안정화 및 경제발전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고소득 국가 도약 지원

콜롬비아국가개발계획 (PND '18'22)

- 적법성 확보, 기업이 정신 축진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평등한 사회 구축

한국의 지원목표

- 한국의 경제, 사회개발 경험 공유
- 국가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지원, 지역 내 다양한 고용 기회, 부가가치 창출, 도-농간 격차 해소 지원
- 기업 다각화 지원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 지원
- 안정적인 평화 유지, 정착 및 분쟁, 범죄, 차별 등 개발 저해 요소 최소화 지원

중점분야별 지원방향

지역개발 분야

- 국가균형발전 전략 지원을 통한 지역 격차 축소
- 농업생산성 및 농촌지역 소득수준 증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교통 분야

- 지식 및 기술이전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지원
- 도시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발 역량 강화 지원

산업 분야

- 산업의 다양성 및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혁신성장 산업 육성
- 과학기술혁신단지 운영 및 관리역량 강화

평화 분야

- 분쟁 피해지역 갈등해소 지원, 사회·경제 인프라 확충 지원
- 베네수엘라 난민 위기에 대한 장기적 대응을 베네수엘라 이주민 및 콜롬비아 귀환인의 사회경제적 통합에 중점을 두어 지원
- ICT 도입을 통한 분쟁지역의 공공기관 및 행정의 효율성·투명성 및 시민참여 확대

□ 지원 목표

- 콜롬비아의 고소득국가 도약, 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 개발계획 (2018-2022)의 '적법성', '기업가정신', '평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포괄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 중점협력분야별 선정사유

- ① **(지역개발)** 도·농간 개발 격차가 극심하여 지역별 생활수준 및 소득 차이 다대
→ 빈곤 지역의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및 사회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지원
- ② **(교통)** 넓은 국토 대비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열악하여 운송 및 물류 효율성 저하
→ 운송 및 물류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③ **(산업)** 제조업과 같은 부가가치 창출 산업기반이 미약하고 원자재에 의존적인 산업 구조로 인한 국가 경제 변동성 다대
→ 정책자문 및 기술협력 등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콜롬비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신재생에너지(수력·태양광) 등 혁신성장 산업 및 과학 기술혁신 수준 강화
- ④ **(평화)** 52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770만 명이 넘는 국내 난민(IDP) 발생 및 분쟁 피해지역 빈곤·치안 불안정 문제 지속, 베네수엘라 정세 불안정, 경제 붕괴에 따른 난민 유입(최소 180만 명) 및 지속 증가 예상
→ 평화협정 이후 분쟁복구 절차 및 난민 지원을 통한 분쟁 피해지역 개발 및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의 안정적 정착을 포함한 사회통합 실현

- ◇ **(중점협력분야 선정기준)** 콜롬비아의 국가개발전략 및 부문별 실행 계획, 수원국 요청분야, 양국 간 정책협치, 한국의 비교우위, 기존 진행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함.
- ◇ **(지원방안)** 콜롬비아의 개발수요, 우리의 원조역량, 기지원 사업의 원조효과, 타 원조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고려하여 선정, 중점협력분야에 총 지원 금액의 **70% 이상**을 집중 지원

2 분야별 지원방안

(1) 지역개발 분야

□ 기본 방향

-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개발 관점에서 농촌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와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등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지원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1.2) 2030년까지 국가별 빈곤정도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의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감소
- (SDGs 2.3) : 2030년까지 농업 생산성과 소규모 농민들의 수입 증진
- (SDGs 2.a) : 농촌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제적 협력 투자 증대

□ 분야별 개발수요

- 콜롬비아 농촌지역은 대도시 및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비해 절대빈곤율이 3배 이상 높고, 도로 및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공공서비스 접근성도 열악하여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큼.
- 농촌지역은 도로 및 관계시설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성과 소득수준이 낮고, 대부분의 농촌 개발이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있어 농촌의 지속가능한 생산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토지의 불법 점유 및 이용과 목축업의 과도한 확대 등은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
- 콜롬비아 정부는 농업분야를 우선 지원 분야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며, 재배작물을 다양화하고 도로 및 관계시설 등 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 시킬 계획임.
- 아울러, 학교, 보건소, 상하수도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한편, 급격한 도시화는 콜롬비아가 직면한 과제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교통, 환경오염, 안전, 천재지변 등과 관련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개발 역량 강화 필요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개선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개발 정책 및 사업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및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 지원 가능
- 한국은 도시 주택 및 뉴타운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등으로 단 기간에 도시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개선한 경험과 지식 보유

□ 실행계획

- 농촌의 시장접근성, 소득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생산, 가공, 유통 체계 등 가치사슬 강화하고 수출 가능 품목 확대

- 분쟁 피해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현대 농업기술 전수 및 농민 역량강화
- 토지 및 경제개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등 기본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 주택 및 신도시 건설 지원
 - 한국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신도시 마스터 플랜수립 등 기술 협력 지원

(2) 교통 분야

□ 기본방향

- 콜롬비아의 교통·물류 인프라 정책을 기반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 컨설팅, 지식 및 경험 전수,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콜롬비아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 달성에 기여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3.6) 202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0%로 경감
- (SDGs 9.1)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
- (SDGs 11.2) 안전하고 저렴한 접근·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 제공

□ 개발수요

- 콜롬비아는 세계 경제포럼(2014-2015)의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에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66위 달성
- 그러나,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부족은 콜롬비아의 사회경제 발전의 큰 장애요소로서 높은 물류비용에 따른 내수 시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콜롬비아의 교통인프라의 세계 순위는 도로 126위, 철도 102위, 항만 90위, 공항 78위로 아시아 신흥국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National Infrastructure Agency (ANI) 및 National Development Finance (FDN)등을 설립하였으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PPP법을 도입하고, 연간 GDP의 3% 수준을 교통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임.
-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콜롬비아 정부는 복합운송수단 마스터플랜 (2015-2035) 발표(15.11월)
 - 동 마스터플랜에서는 수출입 활성화, 지역간 통합 및 물류비용 개선 등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방안 및 우선사업 순위 선정
- **(도로)** 도로를 통한 화물운송량 비율은 71%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도로 포장률은 11.8%로 매우 낮고, 포장도로의 50%가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 정부는 PPP등을 통하여 4차 고속도로 양허사업(연장 8,000km)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 규모는 약 51조 페소 수준임.
- **(철도)** 콜롬비아 철도 화물운송량 분담률은 27% 수준으로 석탄 운송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양허사업 등을 통해 1,769km를 철도망을 확장할 계획임.
- **(내륙수운)** 교통수단의 다양화 및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내륙 수상 운송 시설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강을 활용한 운송수단 활성화 마스터플랜 발표함(2015)
- **(항만)** 항만을 통한 물동량은 연간 183백만톤('13)으로 2002년 대비 150%의 증가하였고, 파나마 운하 확장에 대비하여 대서양 및 태평양연안의 공공항만 확장을 계획 중임.

- **(공항)** 2014년 기준, 약 58백만 명의 승객이 공항을 이용하였고 전년 대비 7.61% 증가하였음.
- 보고타 엘도라도 공항 이용객은 전체의 47.25%로 콜롬비아 정부는 증가추세에 있는 엘도라도 공항 이용객에 대비하여 보고타 인근에 신공항 건설을 구상 중에 있음.
- **(대중교통)** 콜롬비아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 높은 도로 파손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임.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단기간에 전국도로 교통망을 확장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투자, 법률 및 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콜롬비아 정부가 교통 정책을 수립·실행하는데 지원 가능
- **(도로 및 철도)** 한국은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도로 교통 체계 구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 차량제작, 신호체계 구축 등 철도인프라 분야 경쟁력도 우수
- **(항만 및 공항)** 한국은 항만 및 공항 건설·운영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하고 있어, 공항운영 컨설팅 및 항만 개발과 관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가능

□ 실행계획

- 철도, 지하철, 공항 및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KSP를 통한 한국의 교통 인프라 개발 경험과 지식 공유
-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한 금융

(3) 산업 분야

□ 기본방향

- 정책 컨설팅, 제도 개선을 통한 콜롬비아 산업·중소기업 경쟁력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 (SDGs 9.5) 개발도상국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역량 향상

□ 개발수요

- 콜롬비아 경제는 개방경제로서 외국인투자 및 민간부문의 역할이 활발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콜롬비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비중이 매우 높으며, 상대적으로 제조업 및 농업 비중은 낮은 상태임.
- 원자재 중심의 산업 구성은 낮은 고용효과 및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등 변동성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임.
- 이에 따라, 콜롬비아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구성 및 수출 기반 다양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함께 기후변화대응 등 환경문제의 적응·완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수력·태양광) 등을 활용한 친환경 혁신성장 산업 육성 필요
- 한편, 콜롬비아는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동 분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전자, 자동차, 정보통신(ICT), 신재생에너지, 조선 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노동집약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 혁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였음
- 한국은 다양한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발전과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실행계획

- 자동차 부품, 전자, 정보통신(ICT), 신재생에너지, 식품 가공 등 고용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정책자문 등을 제공하여 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 및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협력 지원

(4) 평화 분야

□ 기본방향

- 콜롬비아 정부의 평화협정 체결(2016년) 이후 분쟁 피해복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분쟁 피해지역 사회경제인프라 확충 및 내전난민, 무장 해제 반군 등 분쟁 피해인구 사회 재통합 기여
- 베네수엘라 정치,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최인접국, 최대 난민 유입의 위기가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대응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9.1)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
- (SDGs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 감소
- (SDGs 16.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정책의 추진 및 법제화
- (SDGs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
- (SDGs 16.7) 모든 수준에서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인 의사결정 보장

□ 개발수요

- 콜롬비아 국가 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52년간 지속된 정부와 반군 간 내전으로 특히 분쟁지역에서 폭력사태, 코카 등 불법 작물재배 등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생활수준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등에서도 여타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평화협정 체결 후, 콜롬비아 정부는 동 협정 이행을 위한 ‘평화 절차(Peace Process) 추진 중으로, 중점 분쟁 피해지역 개발 프로그램(Programas de Desarrollo con Enfoque Territorial: PDET)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피해복구를 추진 중임.
 - 이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평화 관련 부처를 신설(2015년)하였으며 ▲분쟁지역 개발, ▲반군의 정치 참여기회 제공, ▲불법작물 대체, ▲반군의 무장해제 및 사회 재정착,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① 반군과의 분쟁지역, 특히 PDET 대상지역의 사회인프라 구축지원

- 2016년 평화협정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그간의 무력분쟁으로 인해 경제 및 사회 개발이 시급한 지역을 지역중점개발프로그램(PDET, Programas de Desarrollo con Enfoque Territorial)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콜롬비아의 많은 농촌 지역은 분쟁으로 인해 학교, 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이 파괴되어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소규모 지역 공동체 인프라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교육·보건 등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분쟁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소득을 창출하여 정부의 사회통합 및 평화구축 계획에 대한 대중의 신뢰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사회 인프라 개선 사업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하는 분쟁지역 주민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개선은 물론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② 국내난민 및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

- 52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발생한 770만여 명의 국내난민과 더불어, 현재 베네수엘라 국가 불안으로 콜롬비아 내 베네수엘라 난민 인구는 180만명을 초과하여,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 지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적극 요청 중에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 긴급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물품지원과 더불어 ▲교육(아동) 및 보건 분야 기초서비스 제공 지원 ▲난민의 콜롬비아 영구 정착 가능성을 고려한 경제적 역량 강화(직업훈련 등)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 문제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 지속 가능 문제로 받아들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난민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음.

③ 직업훈련 등을 통한 무장해제 반군의 사회 재정착 및 통합 지원

- 평화협정 체결 이후 무장 해제 반군의 재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사회경제 재통합 정책(National Policy on Social and Economic Reintegration)"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특히, 콜롬비아 정부는 한국 통일부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해 직업 교육 훈련 등 탈북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전수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음.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성공적인 농촌개발사업 추진하여 지역 소득개선, 부가가치 창출 등 단기간에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이룬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선진화된 IT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혁신, 행정개혁, 부패척결에 큰 성과를 이루었고, 세계 여러 국가에 전수한 경험이 있으며,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한국은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탈북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 지식 및 경험 전수를 통해 콜롬비아 평화 구축과 사회 통합 역량 강화에 기여 가능함.

□ 실행계획

- 콜롬비아 정부의 평화구축 사업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내전난민 토지 귀환 및 공공 서비스 인프라 구축 촉진 ▲소유권 보장 및 국가적 토지 대장 시스템 이행 ▲반군 퇴역군인 사회 재배치 과정 지원 ▲불법 작물 대체 및 지역 생산성 강화를 위한 민간과의 파트너십 구축

위주 지원

-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한 현장성 강화를 목표로 현지 정부기관, CSO 및 콜롬비아 주재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사업 추진 시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려 및 환경주류화를 내재화하여 포괄적 원조 사업 추진 도모

수원국 개발목표(콜롬비아 국가개발전략)

: 적법성 확보, 기업이 정신 축진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평등한 사회 구축

CPS 목표

: 지역개발, 교통인프라 구축, 산업 및 과학기술혁신 경쟁력 강화, 평화구축 지원을 통한 콜롬비아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평가 지표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 전략 지원을 통한 지역 격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1.2, 2.a 농업생산성 및 농촌지역 소득수준 증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2.3, 2.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및 기초 인프라 부족 관련 기관의 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소득 수준 개선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대된 농업 생산량 농민 등 빈곤층 소득 증대 농업기술 교육을 받은 농업 분야 인력 수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 및 기술 이전을 통한 교통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3.6, 11.2 도시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발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9.1,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부족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이용률 저조 재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능형 교통 시스템 역량 강화 도시 교통 인프라 효율성 개선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이행 지원 교통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 및 경험 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된 교통 인프라 수 교통 분야 관련 교육을 받은 인원수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의 다양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9.2, 9.3, 9.5 과학기술혁신 단지 운영 및 관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변화 법규 및 제도 미비 관련 인프라 미비 유관기관 간 협력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정책 역량 강화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과학기술혁신 인적 역량 및 경쟁력 강화 관련기관 설립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인원 수 제도개선 제안 및 입법화, 반영 건수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지역의 사회 인프라 및 지방 도로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9.1 직업훈련 등을 통한 무장해제 반군의 사회 재정착 및 통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16.1, 16.3, 16.6, 16.7 국내 난민 및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16.3, 16.6, 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재원 및 정책역량 부족 사회 재정착 및 통합을 위한 교육시설 부족 난민 자원을 위한 정부 물적·인적 자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지역 기초 인프라 구축 사회 통합 프로그램 선진화 난민 기본권 보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국내외 난민 대상 신규 지원 프로그램 수

IV. 이행전략

- **(민관협력)** 콜롬비아의 경제수준 향상, 사업의 대규모화, 채무관리 강화 등을 감안, 민간의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NGO 등과의 협력 강화
 - 상위중소소득국(UMIC)에 해당되는 콜롬비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해 원조자금·정책금융·민간투자 등 패키지형 금융을 활용한 PPP 방식 지원 추진
 - 국내 및 콜롬비아 NGO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정보 공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원조 투명성과 국민 지지기반 확보
- **(원조 조화)** 중점 분야 중심으로 현지 공여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유망 협조용자 사업 발굴
 - 콜롬비아 정부와 선진 공여국, MDB 등이 합동으로 운영 중인 회의체에 적극 참여
 - WB 협조용자 MOU(3억불), IDB 협조용자 퍼실리티(3억불) 등을 적극 활용해 유망 협조용자 사업 발굴
- **(유·무상 연계)** 사업 전단계의 유·무상 연계를 통해 유망 원조사업 발굴 및 사업의 완결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사업 발굴 단계부터 정책자문(KSP, DEEP 등), 무상 기술협력(교육, 운영인력, 기자재 등), 비구속성 유상 금융협력(대규모 건설·운영자금 등) 등을 콜롬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패키지형 연계 추진
 - 유·무상 합동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중점분야별로 원조총괄부처 및 수원부처와 합의된 세부 지원계획 수립

- **(사후 관리)**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종료된 사업에 대해 콜롬비아와 공동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수립
 - 사후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일정기간 후 수원기관이 자립하여 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
 - 사업의 성격 및 리스크를 감안하여 하자보수기간을 적절히 연장하고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요건과 관리감독 강화
 -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초청 연수 등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 **(삼각협력)** 한국과 콜롬비아는 제3개도국 경제개발 공동지원을 위해 삼각협력 추진 검토
 - 콜롬비아 외교부 및 국제개발협력청(APC)는 2019년 남남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개발협력 방식 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
 - 제3개도국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삼각협력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공동으로 사업 검토

- **(SDGs 기여)**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주류화 하여 수립
 -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분야·방식·체계에 SDGs 반영하고,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이후 새로이 발표되어 추진 중인 **정부의 개발협력 구상 또한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이행함으로써 SDGs 달성에 전략적 기여**
 - “Leave No One Behind” 2030 개발의제의 주요 원칙에 따라, ODA 사업 전반에 걸쳐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증진**(아래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참고)

— <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 —

- ①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성 분석(Gender Analysis)* 실시
 - * 성별에 따른 노동활동 패턴 가정 및 사회내 성별간 관계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등을 조사·분석
- ② 사업 설계 단계에서는 성 분석 결과를 감안, 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 * 예 : 여성의 필요를 반영한 목표 삽입, 성별 분리된 목표치 설정
- ③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계획된 성평등 관련 조치의 성실한 이행 및 다양한 관계자와 공유
 - * 계획 외, 가용한 여성 참여수단 지속적 모색 및 활용
- ④ 사업 평가·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산출 및 성과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
 - * 사업의 수혜대상자 및 성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기술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조실에서 기 통보한 ODA 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 적용지침(15.8.24) 참고

VI.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여 ODA 사업 발굴 단계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
 -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통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합동대응

< 리스크 매트릭스 >

위험 요인	모니터링 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정치적 혼란)	관련 상황 발생 시
2.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 지연	상 시
3. 국제유가하락 위험	상 시
4. 기타 경제, 자연재해, 공여국간 협력 약화 등 일상적 위험 요인	관련 상황 발생 시 (연 1회 정기 모니터링)

2 평가 방안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 지표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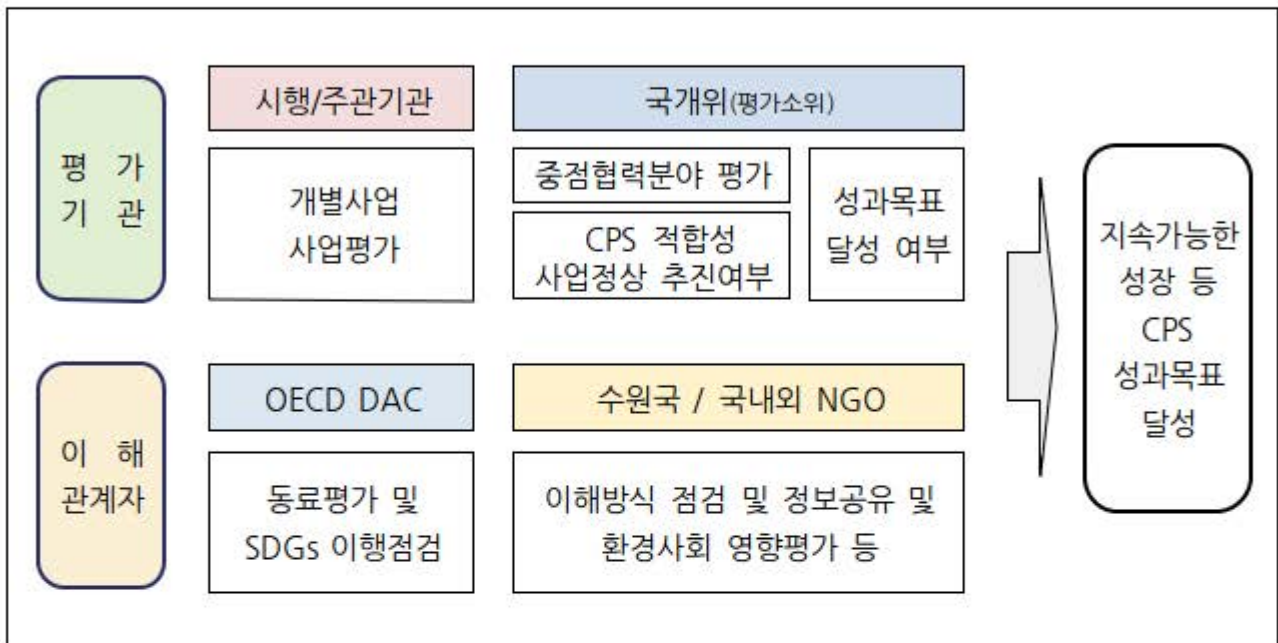
	평가시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	CPS 적용 2-3년 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	CPS 종료 1년 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CPS 수정 및 재수립

-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성과점검방안 가이드라인의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 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 **(중점협력분야)** 이행점검상 성과지표를 활용한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포함, CPS에 따른 사업발굴 및 이행결과를 점검

〈 평가 절차 도식도 〉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1 원조 성과 평가

- **(총괄)** 제23위 중점 협력국인 콜롬비아에 대한 원조 규모는 101억 8,680만원이며, 이는 전체 양자원조의 0.5%에 해당함.
- 지난 5년간(2013~2017) 약 **6개 기관의 부차기관에서 7,842만 달러** 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함(집행액 기준).
 - KOICA의 지원이 전체의 70%를 차지해 제일 크며, 그 뒤를 EDCF,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잇고 있음.
- 무상원조 사업으로 이 기간에 총 **4,996만 달러**를 지원함
 - 2015~17년에 對콜롬비아 지원은 주로 무상원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지원 중 88.5%를 차지함.
- 유상원조 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2,846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5,000만불의 프로그램 사업을 승인함.

〈한국의 對콜롬비아 지원 추이('13-'17)〉

(백만 달러, 명목가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무상 (집행액)	7.66	9.78	10.86	12.65	9.01	49.96
유상 (집행액)	13.95	10.26	4.25	0	0	28.46
계	21.61	20.04	15.11	12.65	9.01	78.42

자료: OECD 통계

- **(분야)** 2013-2017년간 對콜롬비아 지원은 생산부문(45.6%)이 가장 컸으며, 이어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39.4%),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7.9%), 기타 다부문(7.0%) 상위를 차지함(집행액 기준).

□ 일 반

-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북쪽으로는 베네수엘라, 남쪽으로는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며, 인구는 4,981만 명(2019)임.

□ 정 치

- 2018년 6월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중앙민주당(Centro Democrático)의 이반 두케(Iván Duque Márquez)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중앙민주당은 2018년 3월 치러진 총선에서 상원 19석(총108석)과 하원 32석(총 172석) 확보에 그쳐 정치적 입지가 다소 불안정하며, 이에 따라 이반 두케 신임 대통령은 정책 구현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차기 총선은 2022년 예정

□ 경 제

콜롬비아 주요 경제지표 (국내경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2,936 (4,271)	2,828	3,145	3,369	3,552
	1인당 GDP	달러	6,089 (8,859)	5,800	6,380	6,761	7,049
	경제성장률	%	3.0 (4.5)	2.0	1.8	2.8	3.6
	재정수지/GDP	%	-3.5	-2.90	-3.0	-2.7	-2.1
	소비자물가상승률	%	5.0 (2.6)	7.5	4.3	3.2	3.4
	정부채무/GDP	%	50.4	49.8	49.4	48.7	47.8
대 외 경 제	환율(달러당, 연중)	Ps	2,741.8	3,055.3	2,951.3	2,911.0	3,010.5
	경상수지	백만 달러	-18,549 (-16,150)	-12,025	-10,438	-9,566	-9,600
	경상수지/GDP	%	-6.3	-4.3	-3.3	-2.8	-2.7
	상품수지	백만 달러	-13,479	-9,159	-4,759	-3,043	-2,752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46,104	45,962	46,699	45,804	46,807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24,100	138,880	146,775	152,848	157,538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외채잔액/GDP	%	42.3	49.1	46.7	45.4	44.4
단기외채	백만 달러	14,800	14,600	17,300	19,354	-
외채상환액/총수출	%	25.3	23.4	34.1	24.2	28.1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3 수원국 내 공여 활동

□ 주요 공여기관 활동

- 2013년부터 2017년의 5년 총 지출액 기준으로 콜롬비아에 대한 최대 공여국은 미국(29.6%)이며 그 다음으로 프랑스(24.0%), 독일(16.4%), EU(6.0%), 캐나다(3.1%) 순임
- 상위 5대 공여국 기관의 지원 총합이 전체 對콜롬비아 ODA의 약 79%를 차지함
-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콜롬비아에 8천만 달러를 제공하여 대 콜롬비아 전체 ODA의 약 1.4%를 차지하며, 2013년 이래로 감소 추세임
- 주요 공여국들은 평화구축을 지원목표 또는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있으며, 환경복원력 또는 환경보전(미국, 독일), 분쟁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또는 평등사회 구축(프랑스, 캐나다) 또한 다수 공여국의 중점분야로 설정됨.
- **(미국)** 미국은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54%)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어업(23%),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9%), 환경보호(4%), 긴급 구호(4%)가 그 뒤를 따름.
- **(프랑스)** 프랑스는 환경보호(39%) 분야에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27%), 기타 다부문(19%), 교육(7%), 운송 및 창고(6%) 순으로 지원함.
- **(독일)** 독일은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39%) 분야에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보호(23%), 교육(13%), 운송 및 창고(10%), 기타 다부문(7%) 순으로 지원함.

- (EU) EU는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39%)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가장 크며, 긴급구호(18%), 기타 다부문(17%), 농림어업(10%), 환경보호(5%) 순으로 지원함.
- (캐나다) 캐나다는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28%)에 대해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어업(22%), 교육(16%), 긴급 구호(9%),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6%) 순으로 지원함.